

#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아이 등교 어찌나

## '민식이법' 시행 두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3월 25일)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시민들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당장,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속 30km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식, 보호구역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도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수반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 짜증을 내거나 지적하는 시민들도 여전하다.

◇3일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등교·학교 앞 '픽업' 안돼=학부모들이 예전처럼 자녀를 등교 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아이들을 내려줬다가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없더라도 누군가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꼼짝없이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태껏 학부모들은 10세 안팎의 어린 자녀들을 출근 길 교문 앞까지 바래다줬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모든 초등학교들이 등교하는 3일부터는 광주시에 5개 자치구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양모(여·38)씨는 "출근하면서 딸 아이를 교문 앞에 내려줬는데, 이제는 멀리 내려주고 무사히 들어가나 지켜봐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정원이 올라온 상태다.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여성은 "민식이법으로 차량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왕복 8차선 도로를 걸어서 등·하교할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다"고 썼다.

학원들도 고민거리가 생겼다. 아이들 하고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대기하다가 학원으로 실어날랐지만 이제는 교문 앞 정차가 불가능해졌다. 학원들의 픽업 시스템은 맞벌이 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는 점에서 자칫 학원생 유치가 힘들어질 지 고민이다.

교문 앞 하차 안돼 부모들 고민  
안전 공감 속 불편함에 짜증도  
학원 차량 하차길 픽업 차질

시속 30km 운행 대부분 잘 지켜  
초등생 친 속도 위반 운전자 입건  
속도제한 표지판 보완 목소리도

◇시행 2개월, 혼란 여전=지난 3월 말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유통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가중처벌'한다거나, 사법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운전 행위도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의 주장 등이다.

민식이법(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하고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2주 이상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된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광산경찰이 입건한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에 광주시 광산구 첨단초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친 혐의(특가법)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30km) 이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초등학생(12)을 치어 다치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1단지 앞 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7)을 친 SUV 차량 운전자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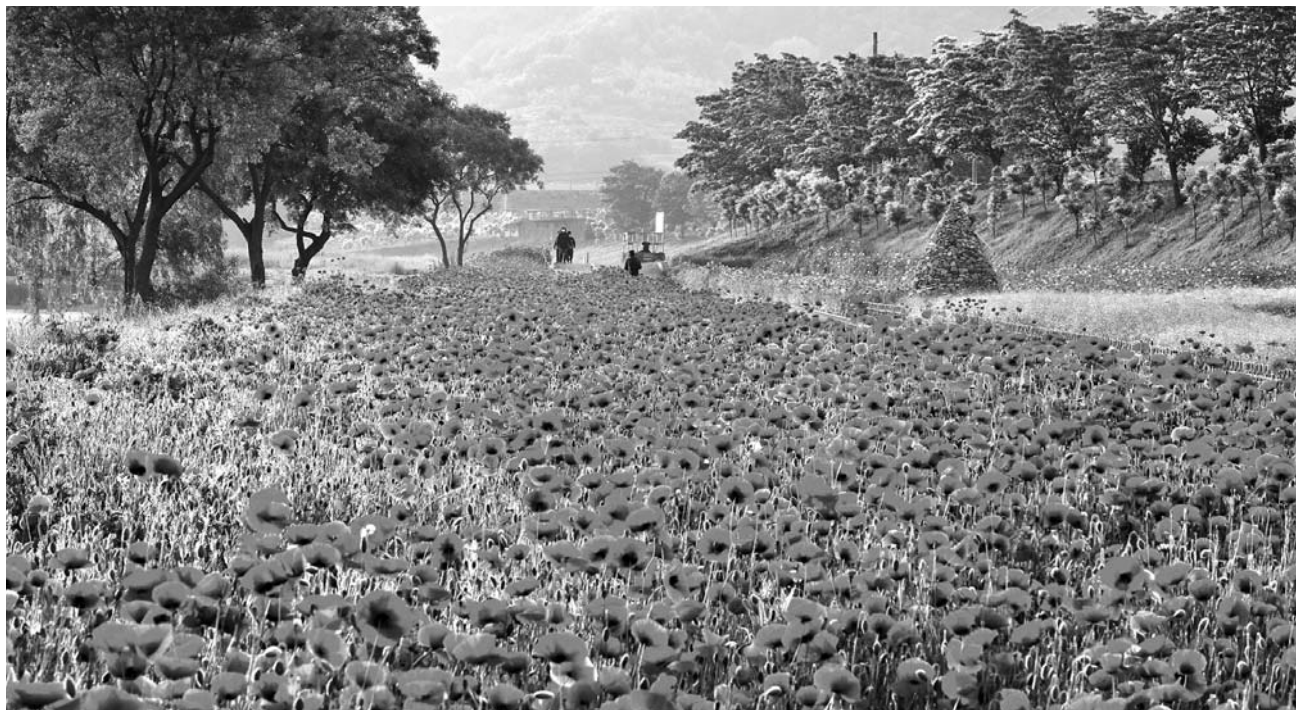
경찰은 스쿨존에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을 감안해 더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점심 시간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점심 시간에도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는데 접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서구 금당초교 일대는 점심시간이면 줄지어 늘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적지 않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30km)를 적용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50km이상으로 달리다 갑자기 30km로 속도를 늦추는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잇따르면서 속도 제한 표지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아닌, 야간에는 민식이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03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742건)에 견줘 23%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꽃양귀비 뒤덮인 향릉강변  
장성군 향릉강변이 지난 31일 꽃양귀비가 붉게 뒤덮였다. 향릉강변 정원은 꽃양귀비를 비롯해 노란꽃장포, 금영화, 안개초 등이 만개했다. <장성군 제공>

##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정당”

### 대법원 확정 판결

담양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관광개발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

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심과 항소심 판결대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관광객들은 지난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뒤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을 제기했다.

담양군은 지난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km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담양군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공 재산인 가로수길과 메타랜드 내 시

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가는 담양군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오랜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된 만큼 관광객에게 편익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현 기자 nyc@kwangju.co.kr

## 오늘 전두환 재판…전씨는 불출석

### 김희송 전남대 교수·김동환 국과수 실장 헬기사격 증인

전두환(89)씨 재판이 1일 열린다. 다만, 재판부가 전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전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 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와 전일빌딩 탄흔 감정 보고서 작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58) 총기연구실장이 법정에서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인의 감정 요청에 따라 기존 탄흔 외에 추가로 발견된 전일빌딩 헬기사격 총탄흔적에 대한 감정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김정서에는 전일빌딩 10층의 탄흔들이 헬기사격에 의한 것인지 조사한 결과와 245개 탄흔(외벽 68, 실내 177개) 외에 25개 탄흔이 실내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의 증언을 통해 헬기 사격의 근거를 제시하며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씨 측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으로 활동했던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도 증언토록 해 헬기 사격의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기존(65석)보다 줄여 33석에 대해서만 선착순으로 배부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노태우 아들 재현씨 5·18묘지 또 참배

노태우씨 장남 재현(55)씨가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였다. 노씨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3번째로,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또 찾아오겠다”고 했다.

지난 31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재현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노태우씨 이름으로 헌화를 했다.

이날 재현씨는 민주주의 방명록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재현씨는 지난해 8월 23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처음 방문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5일 오월어머니집을 찾았다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그는 이날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 안치된 이한열 열사의 묘도 찾아 어머니 김옥숙씨의 이름으로 헌화했다. 재현씨는 옛 전남도청 일대를 돌아본 뒤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사무총장 김형미씨를 만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씨에게 “진정한 사회는 5·18 진상 규명에 대한 협조라며 “노 전 대통령도 5·18 발표명령자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현씨는 “아버님이 병상에 계신지 오래돼 물리적 역할을 맡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대 간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의사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정당”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의료재단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7월 설립 등을 마친 뒤 서구청에 요청받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고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

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부지 매수와 건물을 건축한 뒤 병원을 개설·운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고 판단, 서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국민 보건에 향상·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원 이상 4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주택 주택자금 대출
- 50세 이상 초·중·고·대졸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자금
- 지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 중·고·대졸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자금
-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응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응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